

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

박정관(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)

1.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문제점

가.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

- 의약분업 때 고시가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시 "보험약에는 약가마진이 없다" 라는 대원칙에 따라, 기존 약가마진을 병원엔 처방료, 약국에는 조제료를 신설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, 약가차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 정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,
- 따라서,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차액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중의 혜택 제공 논란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

나. 일부 대형 요양기관 혜택 집중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

-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에 혜택이 집중되고, 의원이나 약국은 미미하여 수익이 대형 요양기관으로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,
 - 전체 시장형 실거래제도 참여율 11%
 - ▷ 상급종합병원 95.7%, 종합병원 85.9%, 병원 53.7%, 의원 8.5%, 약국 9%

(출처 :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고찰, 성균관대학교, 2013.10)

- 또한 국민입장에서조차 대형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되는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, 대형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을 부추길 우려가 커서 요양기관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

다. 1원낙찰 등 거래질서 문란 발생 우려

- 1원등 초저가낙찰은 아무리 경쟁입찰이지만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항으로서, 그동안 회원사들에 대한 초저가 낙찰 자체당부 및 정부당국에 구입가 미만 판매등 약사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,
- 1원 낙찰품목 : 제도시행전 1,705품목 → 제도시행후 2,515품목
- 그 결과, 어느 정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, 인센티브 유인으로 인해 1원낙찰 등 초저가 낙찰이 성행하여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만연될 것이 우려됨

라.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외에 약가인하기전 정책 다양

- 약가인하에 있어서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방식을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하고,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, 사용량-약가 연동, 계단식 제너릭 약가제도 및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등과 같은 약가인하기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약가인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

마. 제약산업 붕괴 및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

- 그동안의 입찰시장을 살펴보면, 다국적 제약사 품목의 경우 현행 약가유지 및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으나, 국내제약사의 경우 초저

가에 낙찰되는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

- 약제상환차액이 발생한 제약사수 및 품목수

▷ 국내사 250개사 7,893품목

▷ 다국적사 24개사 792품목

(출처 :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2012.9)

-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하여 의약시장이 선진국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 분명하고,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은 외국에 내 줄 수밖에 없으며,
- 또한 제도 시행시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기 위하여 의약품의 처방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증대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
2.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입장

- 보험약가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목적 실익을 상실하였고,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, 유통과정상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,
-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붕괴 및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함